

데스크시각



최재호 편집국 부국장·경제부장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은 지 꼭 20년. 그러나 지금의 한국 경제는 또다시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은 구조 조정과 체질 개선이다. 비록 타의에 의한 것이지만 외환 위기 기간에 이뤄진 개혁은 한국 경제를 리셋하는 역할을 했다.

세계 경제의 혼풍과 이로 인한 수출 호조 덕분에 올 3% 성장률 달성이 유력하지만 여전히 한국 경제 성장률은 세계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외환 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내수는 여전히 소비 절벽 우려를 떨

변화와 혁신만이 살 길이다

치가 어렵다. 금리 인상 재개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큰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과 사람의 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워야 새로운 경제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때를 놓치지 않는 '스피드 경영'이 필요하고 이를 지휘할 CEO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 중심 새로운 경제

비단 살아남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장까지 이루기 위해서 리더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기존의 가치와 관행을 고수하는 관리자에서 벗어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기업가 정신이다. 기본적으로 이윤 창출을 위한 미래 예측의 통찰력과 과감한 도전, 그리고 창의·혁신 정신이 요구된다.

무엇이든 만들면 팔리던 공급자 중심의 경제하에서는 제품 생산성과 효율성만 생

각하면 됐다. 하지만 지금은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경제 시대다. 고객 중심의 브랜드 소유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변화와 고객의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고객 중심형 회사로 변모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내실을 다지고 혁신을 꾀하는 것 외에 리더는 조직 내에서 탁월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키워야 한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차세대 리더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것 또한 필수 과제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얼얼마담에 불과한 리더를 원하는 것이다.

전망 어두운 향토 기업들

최근 지역 경제계에는 우울한 소식이 많다. 통상임금 문제로 골치가 아픈 기아 자동차, 매출 담보 상태에 빠진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광주신세계 등. 더욱이 지역 경제의 중추였던 금호타이어는 곧 금호

산업과 완전 결별하고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67년 향토 기업 보혜는 안방에서 시장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매출 하락으로 인한 구조 조정의 아픔을 겪었다.

특히 금호타이어와 보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다. 금호타이어는 기업 정상화를 어떻게 이뤄 낼 것인지, 호남의 향토기업이라는 우산을 벗어난 기업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가 숙제다.

67년 향토 기업 보혜는 그동안 변화와 혁신을 이루지 못해 빼앗긴 지역 시장 회복이 과제다. 하루빨리 기업 준비를 마치고 100년 기업을 향해 다시 신발 끈을 매야 한다. 흔들리는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100년 기업이라는 미래 비전을 향해 전 직원이 다시 뛰어야 한다.

현재의 경제 상황은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경제 시대다. 소비자들은 차별적 제품과 서비스, 약속을 지키는 기업들을 높이 평가한다. 이를 알고 실천하는 리더만이 기업을 생존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은편칼럼



류동훈 (사)광주전남행복발전소 운영위원

필자는 딸만 둘이 있다. 아직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이다. 남들은 아들이 없어서 허전하지 않냐고 묻기도 하지만, 난 그때마다 "딸만 둘이 있어서 천만다행이다"라고 말하면서 "나 닮은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냐"고 답하곤 한다.

기고



류한호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촛불 1년이 지난 이 시점, 바야흐로 지방 분권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촛불은 더 이상 간접적으로만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틀에 자신의 권리를 위임해두지 않겠다는 시민적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다.

전국 지방공공에서 지방 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이미 전국 10여개 시도와 많은 시군구들에서 '지방분권 개헌 추진 결의대회'가 열렸다.

지방 선거와 여성의 정치 참여

말을 들으면 그냥 덤덤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두 딸의 아버지이며, 아내의 남편이며, 누나들의 동생이고, 여동생의 오빠였다.

인류 역사를 'history'라고 쓴다. 어원은 남자들의 이야기가 곧 역사라는 뜻이다. 그런데 남자들이 주도한 인류의 역사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남자들의 공격성은 전쟁을 끊이지 않게 하였고, 무기 경쟁을 불러 일으켜 결국은 핵무기의 위협으로 인류를 멸망의 절벽 앞에 데려다 놓았다.

여성은 본성적으로 생명을 잉태하기 때문에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평화를 지향하며, 감성이 풍부하다. 그리고 심성이 더 따뜻하여 어려운 이웃들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아내에게 여자의 마음을 여자화 남자화 누가 더 잘 알 것 같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여자는 여자의 마음을 바로 알지만,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번역기로 돌려야 알아먹는다고 했다. 내가 바로 번역기가 필요한 남자다.

우리나라 20대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은 17%이고, 현재 광역단체장은 0%, 기초단체장은 4%이며, 광역의원은 14%, 기초의원들은 25%이다. 특히, 광주광역시에서 여성 광역·기초단체장 모두 지난 20년 동안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

남편 남성이 정치를 주도하는 우리나라는 1.17명 세계 최하위권 출산율을 보인다. 남성이 주도하는 정치에서 결국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최근 광주에서 개헌 조항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비율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을 넣자는 내용의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한 주장을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촛불 1년, 이제 지방 분권 개헌이다

의가 결정되고 있다. 광주도 오는 30일 북구회에서 시민들과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 대회를 열 예정이다.

경직된 중앙 집권은 후진국의 공통점 이요, 지방 분권과 민주적 시민자치는 선진국의 공통점이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명목만 차지일 뿐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지방정부를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나라를 살리고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 정책을 넘어 지방 분권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중앙 집권의 적폐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분권 개헌을 하여 헌법 제1조에 지방 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다양한 분권적 정치를 규정

했다. 지방 분권 개헌 운동은 프랑스처럼 헌법에 지방 분권 국가임을 선언하고, 지역에 불리하지 않도록 재정 분권 등 분권적 요소들을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 당위성과 필연성, 그리고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 분권 개헌에 대한 기대를 세우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개헌 과정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는 지난 2월분기 개헌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했다.

권 개헌 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개헌 특위는 지역별 순회 공청회를 거쳐, 기본권, 정부 형태와 더불어 지방 분권의 확대 여부와 그 수준 등 개헌의 핵심 의제에 대해서 집중 토론을 하고 있다.

無等鼓

지난 12일 이란 북서부 케르만샤주와 이라크 북동부 쿠르드 자치지역 솔라이 마니아 주(州)가 맞닿은 국경지대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다.

올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최악의 인명 피해였다. 이 가운데 이란의 사상자 수가 훨씬 많았다. 이란에서만 530여 명이 사망하고, 이라크에서는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진 피해는 그 것을 둘러싼 환경이 어렵더라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 이 시대 정신이다. 중앙 집권으로 망가진 이 나라는 지역민 스스로 문제를 해법을 모색하는 지방 분권, 시민이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는 지방 자치, 그리고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잘사는 균형 발전을 통해 되살아날 수 있다.

社說

한국당은 5·18특별법 제정 만지 걸지 말라

발포 명령자, 헬기 사격, 암매장 등 5·18 핵심 의혹들을 밝혀내는 열쇠가 될 '5·18 진상 규명 특별법'이 수개월째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된 채 진척 없이 표류하고 있다.

광주시와 이개호·최경환 의원의 공동 주최로 그제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우월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까지 손을 맞잡고 이번 정기국회에 함께 입법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그게 안 되면 국민의당과 손잡고 사회적 참사법을 통과시켰듯이 패스트 트랙으로 올려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5·18 진상을 규명하지는는데 왜 한국당이 반대하느냐"며 "문제인 대통합당, 민주당도, 국민의당도 이견이 없기 때문에

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 역시 지난달 5·18 특별법의 신속 처리 안전 지령 의사를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

지난 2015년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 재적 의원 또는 안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5분의 3의 요구로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 최장 330일 이후에는 본회의에서 의무적으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18 진상 규명은 광주를 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원하는 시대적 과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4.2%가 법안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첫 예산안 심의 졸속 처리되지 않도록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속도가 너무 더디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이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야 간 쟁점에서 총체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이자, 429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증가율도 7%를 넘어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높다. 하지만 당장 예산 처리 진행이 전년도에 비해 더뎠을 느리다.

건이나 된다고 하니 졸속 처리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은 야당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예산안과 민생에 산만을 집중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미래 대책 없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삭감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도 예산안의 நட장 처리는 졸속 심의를 불러왔고, 졸속 심의 뒤에는 국회의원 간 '예산 뒷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국민은 알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는 항목이 많아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

**無等鼓**

지난 12일 이란 북서부 케르만샤주와 이라크 북동부 쿠르드 자치지역 솔라이 마니아 주(州)가 맞닿은 국경지대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다. 540여 명이 사망하고 13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올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최악의 인명 피해였다. 이 가운데 이란의 사상자 수가 훨씬 많았다. 이란에서만 530여 명이 사망하고, 이라크에서는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상자 또한 이란에서는 7100여 명, 이라크에서는 500여 명이 있었다.

**내진 설계**

섬 뉴칼레도니아 근처 바다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일어났다. 전 세계가 지진으로 들쭉거리고 있다. 이란 가운데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늦어지면서 내년에는 진도 7 이상의 강진이 올릴지도 모른다고 예측했다.

경주에 이어 포항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마감재 등 내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대형 지진 참사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일 것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b>光州日報</b>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기(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안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